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

Republic of India

2023년 8월 29일 | 선임조사역(G2) 이진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287천 km ² 	인구 14.3억 명 (2023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3.4조 달러 (2022) 	1인당 GDP 2,379달러 (2022) 	통화단위 Rupee 	환율(U\$기준) 78.6 (2022)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1991년 이후 평균 약 7%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2022년에는 명목 GDP가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영국을 추월하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 정권은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차기 총선(2024년 4~5월 예정) 전까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2023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전망(UN)이며,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영어 구사력(공용어) 및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 등은 성장잠재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로 부상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0. 수교 (북한 동일자 수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 문화협정(1974), 과학기술협력협정(1976), 이중과세방지조약(1986), 항공협정(1992), 관광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6), 형사사법공조조약(2005), 범죄인인도조약(2005), 사증면제협정(2005),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10),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2011), 사회보장협정(201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11,937,316	15,603,258	18,870,071	반도체,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입	4,900,726	8,056,034	8,897,104	석유제품,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433건, 7,815,03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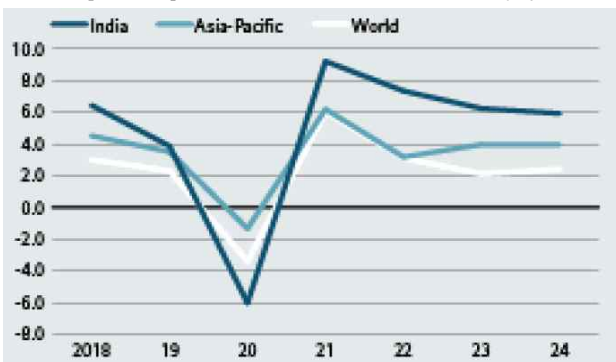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제성장률	3.9	-5.8	9.1	7.2	6.1
소비자물가상승률	4.8	6.2	5.5	6.7	4.9
재정수지/GDP	-7.7	-12.9	-9.6	-9.6	-8.9

자료: IMF, EIU

높은 기준금리,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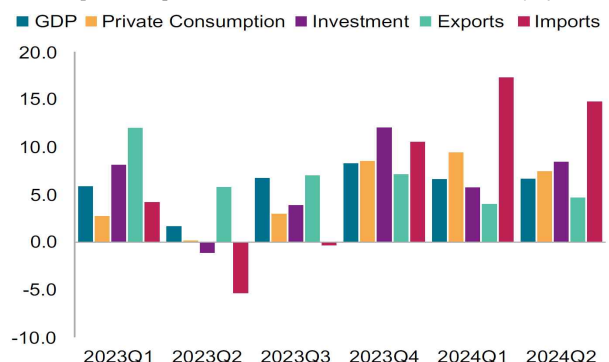
- 인도는 2014년부터 집권 중인 현 모디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7~8%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9년에는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부진, 금융권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유동성 감소, 민간소비 둔화 및 세수 감소 등으로 3.9% 경제성장률에 그쳤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봉쇄조치(2020.3.25.~5.31.)의 여파로 산업생산, 수출,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됨에 따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24.4%(전년동기 대비)로 급락하였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5.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회복,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가치 재부각에 힘입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기저효과 등으로 9.1%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2022년 초에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역시 전년과 유사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과 루피화 하락 압력을 가중시켜 7.2%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EIU와 Fitch는 2023년 인도 경제가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외부 수요 약화 등이 지속되어 정부의 인프라 투자,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낮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1] 인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IU

[그림 2] 인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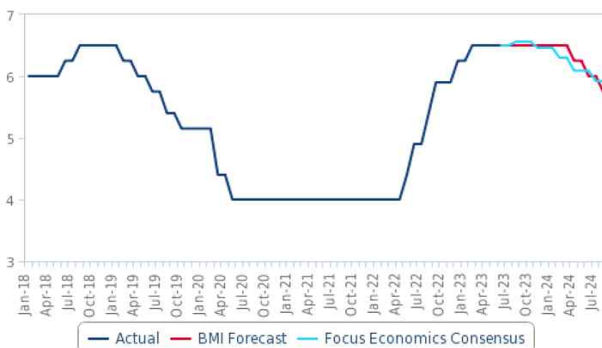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250bp 인상(4.0%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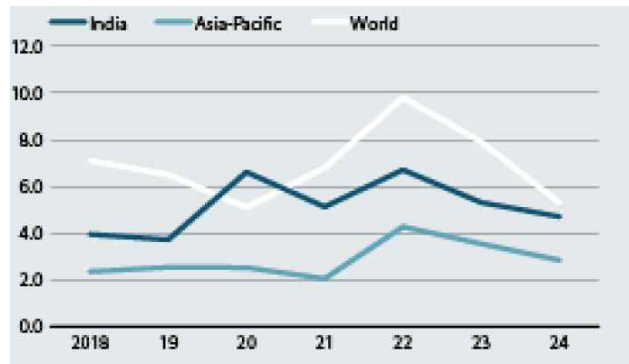
- 인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약 46%(2022년 5월 기준,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가 식음료 품목으로 구성되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 수급 상황이 물가수준을 좌우하며,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2022년 기준)으로 국제유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EIA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 3위(세계 25위)의 원유 생산국이나, 산업 발달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여 원유 수입액이 연간 상품수입액의 약 20%에 달하고 있음.
- 2015년 인도 중앙은행이 중기 물가안정 목표(4±2%)를 도입한 이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인도 중앙은행은 2019년 내수시장 성장동력 약화 우려에 대응하여 총 135bp 규모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 해소를 위해 두 차례(3월·5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115bp 추가 인하한 바 있음. 2022년 4월까지 기준금리 수준은 2000년(4.25%) 이후 가장 낮은 4.0%을 유지해 왔음.
- 한편 2020년에는 봉쇄조치에 따른 농산물 유통 차질, 동부 지역의 홍수 피해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 목표수준을 초과한 6.2%에 달하였으며, 202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5.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밀·팜오일 등 식품·원자재 가격 급등 및 봄철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편자브 지방 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도 중앙은행의 목표치 상단인 6%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50bp를 인상하여 지금까지 기준금리 6.5%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들어서는 식품·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7월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식량 공급망 타격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오르고 있으나 중앙은행 목표수준인 연간 6.0%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IMF 전망 4.95%)으로 전망되며, EIU와 Fitch는 인도 중앙은행이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 6.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BMI(Fitch)

[그림 4]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EIU

국내경제

코로나19 팬데믹 해소 국면이나 운송 인프라 투자 등으로 재정적자 유지 전망

- 인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 및 징세 효율화를 위한 통합간접세*(GST, 2017년) 도입 등 조세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확충,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출, 법인세율 인하(2019년, 30%→22%, 신규법인세 15%) 조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
 - * 중앙정부 및 주 정부별로 난립한 간접세 항목을 단일세제로 통합한 단일상품서비스세(Good and Services Tax)로 석유제품과 주류 등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로 0%, 5%, 12%, 18%, 28%의 5단계로 차등 부과됨.
- 2020년에는 사회취약계층 앞 식료품 및 현금 지원, 중소기업 앞 유동성 공급, 근로자 급여 지원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 핵심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GDP의 약 9%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17.1조 루피)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12.9%로 대폭 확대되었음.
- 2021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직접세, 관세, GST 등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고용 창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발생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9.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해소 국면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높은 상품가격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비료 가격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지출이 이를 상쇄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9.6%를 유지함.
- 2023회계연도에는 전년 수정안 대비 7.5% 증가한 45.0조 루피(5,49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국면에 따라 식품, 연료,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국방, 재생에너지, 통신, 운송 인프라에 대한 자본지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특히, 운송 인프라 부문은 5.2조 루피로 전년 3.5조 루피 대비 48.6%로 증가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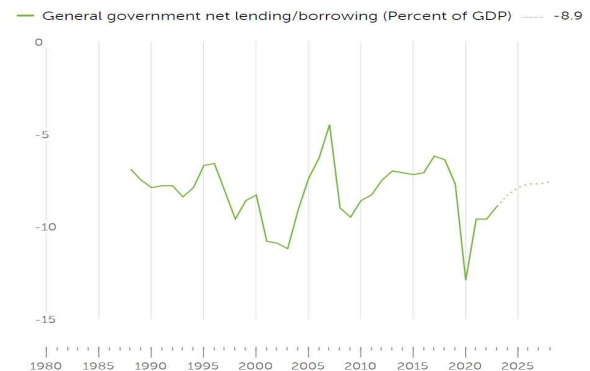
[표 1]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억 루피,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원안	수정안	
재정수입	220,442	234,841	263,228
조세수입	193,477	208,666	233,063
재정지출	394,491	418,723	450,310
자본지출	75,025	72,827	100,096
재정수지	-166,120	-175,532	-178,682
(GDP 대비)*	-6.4%	-6.4%	-5.9%

* 회계연도 기준(4. 1. - 3. 31.)

자료: 인도 재무부

[그림 5] 인도 재정수지 추이(% of GDP)



자료: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 상 수 지	-29,763	32,730	-33,422	-79,051	-45,937
경상수지/GDP	-1.1	1.2	-1.1	-2.3	-1.2
상 품 수 지	-157,678	-95,450	-176,721	-267,188	-280,704
상 품 수 출	331,272	281,545	402,424	458,272	480,874
상 품 수 입	488,950	376,995	579,145	725,460	761,578
외 환 보 유 액	426,880	542,157	569,889	498,022	543,783
총 외 채	570,697	585,512	622,522	671,480	744,428
총외채잔액/GDP	20.1	21.9	19.8	19.8	19.9
D.S.R.	12.8	14.3	6.8	12.8	10.1

자료: IMF, EIU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인도는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상품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자동차·전자기기 부품 및 의약품 원료 등 중간재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수요가 커서 매년 GDP의 5~6%에 달하는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대규모 관광수입(2021년 87억 달러, 세계관광기구(UNWTO)) 및 IT·SW 서비스 수출(2021년 1,567억 달러, 인도 중앙은행), 세계 1위의 해외근로자 송금액(2021년 894억 달러, 세계은행) 등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로 상품수지 적자 폭을 일부 만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액 감소, 중국과의 갈등 격화에 따른 대 중국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미국, 중국 등 수출상대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수입액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상품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54%)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폭은 예년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는 IT·SW 서비스 수출,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 폭을 상회하여,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 반전하였음.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인도 내 수입수요 정상화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3%로 확대되었음.
- 2023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대외 경제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IT·SW 서비스 수출,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으나 적자 기조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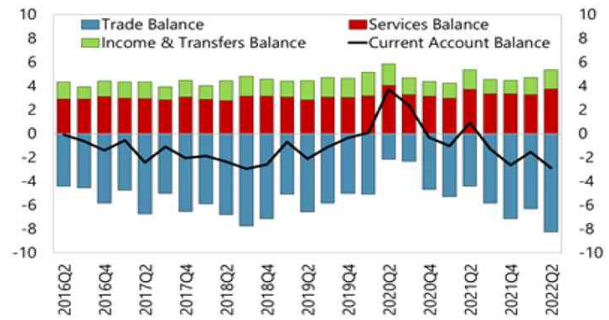
대외거래

[표 2] 인도의 연간 경상수지 추이(억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¹
상 품 수 지	-1,577	-954	-1,767	-2,685	-2,386
서 비 스 수 지	842	871	1,027	1,325	1,354
본원소득수지	-294	-320	-376	-418	-415
이전소득수지	731	731	782	973	1,110
경 상 수 지	-298	327	-334	-805	-337

자료: IMF, EIU

[그림 6] 인도의 분기별 경상수지 추이(%)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구조와 외환보유액 모두 안정적인 편

- 인도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여 정부 재원을 대부분 국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꾸준한 외채관리 노력에 힘입어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 및 외채구조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약 20%, 100% 내외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규모 및 총수출 규모 감소로 2020년에는 동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됨.

* 총외채잔액/GDP(%) : 20.1(2019) → 21.9(2020) → 19.8(2021) → 19.8(2022) → 19.9(2023¹)

** 총외채잔액/총수출(%): 100.2(2019) → 115.4(2020) → 93.4(2021) → 84.5(2022) → 85.8(2023¹)

- 외채의 약 83.5%가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외채 만기·금리 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외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D.S.R.(%) : 12.8(2019) → 14.3(2020) → 6.8(2021) → 12.8(2022) → 10.0(2023¹)

-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및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23년 예상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5,438억 달러(2023.7월 기준 6,039억 달러,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 426.9(2019) → 542.2(2020) → 569.9(2021) → 498.0(2022) → 543.8(2023¹)

-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약 25%(2022년 24.7%, 2023년 전망 22.6%),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약 6~8개월분(2022년 6.1개월분, 2023년 전망 6.5개월분)을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임.

구조적취약성

역내 경쟁국 대비 인프라 기반 부족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2019)에 따르면 인도의 종합 경쟁력은 141개국 중 68위로 조사되었으나,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103위에 그침.
- 도로 인프라 품질(76위→48위)은 모디 행정부 출범 후 5년 간 개선되었으나, 전력 접근성(105위) 및 식수 위생 수준(106위)은 역내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84위, 95위), 인도네시아(95위, 98위), 필리핀(103위, 105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2021년 8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가티 샷티 국가 마스터플랜(Gati Shakti National Master Plan)을 발표한 바, 이는 인도 독립 100주년(2046년)을 앞두고 향후 25년 간의 국가 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동 마스터플랜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대중교통, 수로, 물류 등 7개 분야 인프라 개발 계획으로 총연장 25,000km의 국도 완성, 도시교통 및 기차역 간 네트워크 구축, 고속열차 400량 제조, 산간 지역 인프라 개발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음.

자연재해에 취약한 경제구조

- 인도는 몬순 기후로 인해 강우량이 연중 특정 시기(6~9월)에 집중되고, 취수 가능한 수자원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농업의 GDP 대비 비중이 15.1%(EIU, 2022), 농업 인구 규모가 총 근로자의 44.0%(World Bank, 2021)에 달하나, 관개시설을 갖춘 경작지는 절반(51.4%)에 불과하여 단위면적당 곡물 수확량이 낮고 사이클론,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 인도는 통상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 직전인 5~6월이 연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3월부터 때 이른 폭염이 시작되어 수도 뉴델리는 4월에 1주일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등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였음. 예상치 못한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밀 수확량이 예년보다 감소하자 5월에는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음.
- 또한 시카고 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EPIC)에 따르면,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대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국가임. 석탄 화력발전, 농경지 화전,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기오염이 유발하는 각종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16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됨.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8%에 달하며 368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분석됨(영국 의학저널 Lancet).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예정(UN)이며, EIU의 인구분포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총인구의 68.4%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2.5%,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약 1/4(24.8%)에 달하여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인도는 GDP 대비 산업비중(EIU, 2022)이 농업 15.1%, 산업 30.7%, 서비스업 54.2%이나, 산업별 노동인구(World Bank, 2021)는 농업 44.0%, 산업 25.3%, 서비스업 30.7%로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별 종사자 수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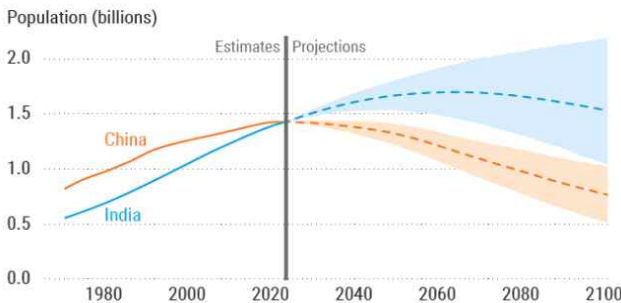
[표 3] 인도의 연령별 인구분포 추정

연령		0-14세	15-24세	25-64세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023년	24.8	17.7	50.7	6.8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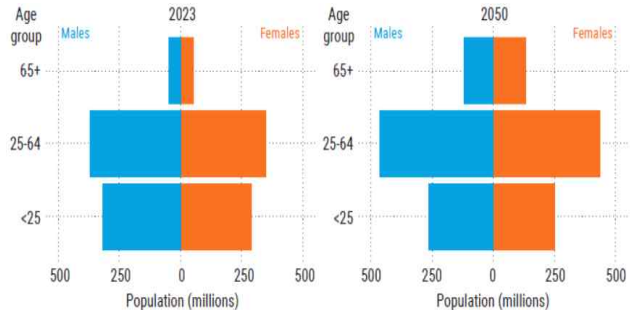
- ADB에 따르면 인도는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1990년대부터 IT·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 거점지로 성장하였으며,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는 대규모 경제와 함께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주도로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이 진행 중이며, Apple,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외 지역에 생산거점을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 1)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다만, 비숙련 노동자, 인프라, 과도한 규제 등 한계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 한편, S&P와 Morgan Stanley는 2031년까지 오프쇼어링(Offshoring), 제조업 투자, 에너지 전환, 진보된 디지털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인도 경제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PwC는 2050년에는 인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7] 인도 인구 규모 전망(십억 명)



자료: UN

[그림 8] 인도 인구구조(2023, 2050)



자료: IMF

정책성과

제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

- 모디 행정부는 2014년 출범 이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경제 개혁정책("모디노믹스")을 추진하여 왔음.
-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Make in India'는 25개 핵심산업의 투자여건 및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부문의 기술경쟁력과 고용 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동 정책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14년 14%에서 2022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항공, 전자기기, 신재생에너지, 식품 가공, 섬유, 화학, 보건·복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25개 산업 부문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한편,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0년 5월 'Make in India'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Self-Reliant India Policy(자립 인도 정책)'을 발표하였음. 동 정책은 ①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 ②인프라 고도화, ③첨단 시스템 확보, ④강력하고 활기찬 시민사회, ⑤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수요 창출 등 5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함.
- 2020년 국내 생산 매출 증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 Linked Incentive, PLI)는 'Self-Reliant India Policy(자립 인도 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향후 5년 간 인도 내 생산제품 수출액의 4~6%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하는 목적임.
- 현재 14개의 대상 섹터(모바일, 의료장비, 통신&네트워크 장비, 자동차, 제약, 의류, 백색 가전제품, 태양광 모듈, 배터리 셀 등)가 있으며, 정부는 추가 섹터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인도 정부는 2019년 석탄 채굴·판매(100%), 위탁 제조업(100%), 디지털 미디어(26%) 등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2020년 항공산업(여객·화물수송) 앞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방위산업 자동승인 지분율 상향 조정(49%→74%), 2021년 보험업 외국인 지분율 상향 조정(49%→74%) 등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인도 상공부는 2021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 및 18개 지방 정부의 중복되는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통합한 'National Single-Window System'을 개설하였음.
- 인도의 FDI 유입액은 최근 수년 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글로벌 기업들(Google, Qualcomm 등)의 릴라이언스 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대규모 지분 인수(280억 달러) 등에 따라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음. 2022년에는 고금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FDI 유입액은 2019~20년보다 저조한 494억원을 기록함.

* 연도별 FDI 유입액(억 달러, UNCTAD) : 399(2017) → 422(2018) → 506(2019) → 641(2020) → 447(2021) → 494(2022)

정치안정

여당의 높은 지지율 및 안정적인 의석 확보

-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소속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연방 하원 의석의 과반(282석/545석)을 차지하면서 집권하였으며, 2019년에도 연합정당(국민민주연합, NDA)이 총선에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음. 모디 총리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도, 연합정당의 안정적인 의석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현 여당이 차기 총선(2024년 4~5월 예정)까지는 정국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것으로 보임.
- 의원내각제를 표방하는 인도는 연방 하원에서 과반석을 점유한 세력이 집권당이 되어 총리를 추대하고 있음. 2019년 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기준으로 연방 하원 의석의 약 65%(352석/543석), 연방 상원 의석의 42%(102석/245석)를 확보하였음.
- 한편, India TV-CNX의 여론조사 결과(2023년 7월)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차기 총선(2024년 4~5월 예정)에서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IU도 인도국민당(BJP)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거 결과를 전망하고 있음.
- 인도는 연방제 공화국으로, 주 의회 선거는 5년마다 직접투표로 실시되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주 여당으로 집권하고 선출된 주 의회 의원은 입법 및 예산권을 가짐. 연방정부 상원 의원과 인도의 대통령은 주 의회 의원 및 연방직할지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중앙정부의 정책 개발과 집행에 영향을 미침.

민주주의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인도는 1951~52년에 첫 총선이 실시된 이후 대규모 쿠데타 없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등 정치·행정체도가 비교적 잘 발달하였음. EIU에서 평가한 인도의 민주주의 지수(2022년)는 167개 평가대상국 중 46위이며, 평가점수(7.04점/10점 만점) 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나, 선거 절차(8.67점), 정부 기능(7.50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

사회안정

계층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1947년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으나 생활 저변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직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 등 정부의 하층 카스트 우대정책을 역차별로 인식하는 상층 카스트에 의한 갈등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 출범 이후 하층 카스트에 대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하리아나 주에서 '공직·대입 등 하층 카스트 우선할당제' 수혜 범위에 중간층 카스트 포함을 요구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특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보호법' 완화에 반발하는 최하층 카스트의 전국적 시위가 발생하였음. 2019년 모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대입 정원 할당제 범위를 중·상층 카스트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12월 인도 의회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접 3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로 이주한 이민자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동 개정안이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종교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이슬람교를 배제함에 따라, 무슬림(인도 인구의 약 14% 차지)과 극우 힌두교도 간에 수 차례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음.
- 2023년 5월 하층민 우대 정책과 관련해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로 약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카스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최하층 달리트(불가촉천민)는 특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소수 민족은 ST(Scheduled Tribes)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마니푸르주 내 최대 부족을 지정부족(ST)에 포함하는 주 고등법원의 결정 후 ST에 기존 편입됐던 이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함.

환경·사회 위험 등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

- Moody's¹⁾는 ESG 요소가 인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여력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ESG 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인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환경)** 열 스트레스, 물 스트레스,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낮은 소득수준 및 소득격차,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 등은 사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 주거, 보건 등 정부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15%가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아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 기대수명, 교육수준, 1인당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2021년 기준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0.633(132위, 191개국 대상)으로 세계 평균 0.732 대비 낮은 수준임.
- **(지배구조)** 정부의 정책 효율성이 높지 않아 환경·사회 위험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도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1)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India – Baa3 negative", 17 March 2023

국제관계

국경 분쟁에 따른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달하는 구간의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사이에 두고 국경 분쟁을 지속하여 왔음. 2020년 5월 라다크 및 시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6월에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 추정)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가 빚어지자, 인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가 강화되었음.
- 2021년 2월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판공湖 지역에서 철군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2022년 중국이 라다크 판공湖를 가로지르는 두 번째 다리를 건설하자 인도는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에서 다리를 짓고 있다고 반발하였음.
- 2022년 12월에는 인도 동북부 타왕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수백명이 난투극을 벌여 다수의 부상자(인도군 20여명, 중국군 다수) 발생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등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인도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동맹체계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공식 제안하였으며, 2023년 7월 기준 피지를 포함하여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2023년 6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였으며, 미국-인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방, 첨단기술, 무역, 기후, 우주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합의함.
- 미국 General Electric(GE)이 인도에서 전투기 엔진을 공동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최첨단 무인기 MQ-9B 30여대의 대 인도 수출 승인을 결정함.
- 이외에도 미 국무부는 인도의 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가 쉽도록 H-1B비자*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함.

*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가 3년 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2022년 기준 H-1B비자 보유자의 73%가 인도 국민임.

국제관계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방국과도 관계 강화 노력 중

-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시절 인도와 소비에트연방(소련)의 군사, 경제, 외교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2022~23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관련 표결에 '기권'을 함.
- 인도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불참하였으며, 2022년 인도의 대 러시아 수입이 전년 대비 4.4배 증가하여 러시아가 인도의 21위 수입대상국에서 6위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음. 인도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화학비료, 해바라기씨유로, 생활물가 및 핵심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F(Fuel, Fertilizer, Food) 품목임(KIEP).
- 한편, 주요 서방국들이 인도-러시아 관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세계 경제와 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 중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서의 대 인도 인식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됨.
- 인도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 국가와 양자간 FTA 및 국제 기술협력, 4자 안보대화(쿼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다양한 외교 노선의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KIEP).

파키스탄과는 오랜 긴장관계 지속

-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시점부터 오랜 갈등을 겪어 왔음. 카슈미르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서쪽)과 인도(동쪽)의 분할통치를 받고 있으며, 인도(힌두교국) 소속 자치구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인도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속하여 왔음.
- 2019년 2월 동 지역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요원 44명이 사망하자,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군기를 투입하여 파키스탄 내 테러 근거지를 공습하였으며, 파키스탄도 대응 사격을 하는 등 48년 만의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바 있음.
- 같은 해 8월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폐지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은 인도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를 벌이자 인도 당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통신 차단, 통행금지,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2021년 2월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의 실효 지배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정전 통제선(Line of Control)에서 모든 무력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는 정전 합의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양국이 인더스 강의 수자원 공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인더스 영속 위원회'(Permanent Indus Commission)를 개최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역사적·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양국의 오랜 긴장 관계가 정전 합의로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태도

대외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

- 인도는 파리클럽을 통한 대외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음. 한편, 2023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인도에 대한 여신잔액은 143.0억 달러(단기 49.9억 달러, 중장기 93.1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4억 달러로 연체비율(0.9%)이 미미한 수준임.
- * 캐나다(41.0억 달러), 한국(31.7억 달러), 독일(21.5억 달러), 일본(18.7억 달러) 등 24개 ECA 잔액 보유
- 미 수은, 영국 UKEF 및 독일 Hermes는 인도에 대해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05)	3등급 (2022.06)
Moody's	Baa3 (2020.06)	Baa2 (2017.11)
Fitch	BBB- (2006.08)	BB+ (2004.01)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최근 평가등급 유지

-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BBB-)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0년 6월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우려, 재정건전성 악화 및 은행권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평가등급을 종전 Baa2(Negative)에서 Baa3(Negative)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한편, 2021년 10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의 빠른 회복,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과 높은 유동성 비율 등으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3년 3월 보고서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이 부담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고려하여 'Baa3 ; 안정적(Stable)'을 유지함.
- Fitch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성장 모멘텀 둔화, 공적채무 증가 경향 등을 들어 2020년 6월에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였으나, 2022년 6월에는 빠른 경제 회복과 금융 부문 부실 위험성 감소 등을 이유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3년 8월에도 인도의 성장잠재력,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등을 고려하여 'BBB- ; 안정적(Stable)'을 유지함.

- 인도는 2022년에 명목 GDP가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대국(UN, 2023¹⁾)이 될 전망이다.
- 2022~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주요국 중에서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 모디 내각의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2024년 임기 종료시까지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인도는 외채구조와 외환보유액이 모두 안정적인 편이며,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음. 다만, 만성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열악한 인프라,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